

제 2차 '종군위안부' 문제아시아연대회의의 보고

②

제 2차 '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1993. 10. 20-22, 일본 사이다마겐 외 국립 부인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작년 8월 서울에서 열린 1차 연대회의 이후 1년이 지나서 모인 이 회의에서 아시아 각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참가국은 남한, 북한, 중국, 필리핀, 타이완, 인도네시아, 일본의 7개국이 참가하였고, 말레이시아는 보고서만 보내었다. 북한, 중국이 참가한 것이 무엇보다 뜻깊었고, 참가한 나라 모두가 1년동안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증언하였고, 조사활동, 재판 등의 구체적 활동을 펴고 있는 점에서 이 문제의 확산을 볼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필리핀,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직 운동이 초기 단계여서 논의수준에서 차이를 느낄 때가 많았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의 자발적 운동은 약한 것 같았고, 중국에서는 여성학 교수가 참가하였는데 중국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고, 타이완이나 인도네시아는 정부도 적극적이지 않지만, 여성운동 역량도 미약하였다. 필리핀 여성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1년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서 조금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여하튼 이 운동에서 한국 정대협외 임무가 막중함을 느꼈다. 여성인권의 발전은 여성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투쟁역량과 성숙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회의 참가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군위안부' 제도를 만든 천황제 파시즘의 뿌리가 온존되고 있으며, 그들이 일본의 지배권력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전후문제 처리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었지만, '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야 분명히 본격적으로 일본내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사람도 우리와 비슷하게 '급히 얼음탕다가 식어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군위안부'문제를 위시하여 전후처리 문제는 1년 사이에 일본의 각 지방마다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꾸준히 이 문제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작업이 이루어졌었다. 이번 회의는 일본 사람만 약 200여명이 숙박을 함께 하면서 참가하였고, 발표도 많이 하였다.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모두 모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이 회의 참가자에게는 10,000엔을 받았고, 참가하지 않지만 후원하는 사람에게는 2000엔을 받았는데 후원자의 수가 예상보다 많아서 나중에 돈 걱정을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 정대협 활동에서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각 여성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위한 활동들을 펴면서, 본부는 없이 네트워크식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런 방식때문에 정책을 가지고 일본정부에 정치력을 행사한다든지, 정보를 수집하고 배분하는 일이나, 매스컴을 활용하는 일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구심체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앞으로 각 단체들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이 사업을 실천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으로 이 문제가 확산되도록 하는 일, 그리고 전후처리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러 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등 조직적으로 저변을 넓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기할 사항

1. 결의문 채택 - 일본정부에게 3차 보고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외 시효부적용 조약에 가입할 것 등 구체적 요구를 하였으며, 피해국들도 몇가지 구체적 실천약속을 하였다. 이 점이 94년도 정대협 활동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국가대 국가 보상방식이 아니라 "개별 피해자들에게 하루속히 배상할 것을 요구함."

2.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정대협이 제기하였으나,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기술적, 방법론적으로 이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계속 다양한 질문이 있었다. 우리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토론하고 답변을 준비하여 충실을 기해나가야 하겠다.

3.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중군위안부를 일본군 '위안부'로 바꾸기로 한자권 국가들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의문에서부터 사용하기로 하였다.

4. 회의가 끝난후 기자회견은 별도로 가지지 않았고, 결의문을 도이 다카고 일본 중의원 외장과 하토야마 관방성 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하토야마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현재 일본이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평화기념관에 일본군 '위안부' 자료비치 계획이 없음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 자료의 비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3차 보고서 및 특별법 제정 등 배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결의문의 요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여, 약속을 받았다.

5. 이번 회의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우편저금 피해자들을 모아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우정성을 방문하였다. 우정성에서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다만 한국경우는 한일협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비문제 등 몇가지 이유로 한국의 우편저금 피해자인 문옥주 할머니 경우도 대만, 중국 피해자들과 더불어 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한국 내외 우편저금 피해자들을 만나서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2차 '중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1993년 10월 21-22일 일본에서 열린 제 2회 '강제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 회의에 참가한 남북한,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의 대표들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작년 8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 1회 아시아연대회의 이후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있는 전후처리를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아시아 각국의 연대를 강화할 것 등을 결의하고 운동을 추진해 왔다.

그 후 제 1회 회의에 참가한 필리핀에서는 피해자가 증언하기 시작하였고, 재판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까지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문제로 부각되었고,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특별조사관을 임명하기까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제 2차 조사보고서에서 부분적이거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1년동안의 우리의 연대활동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보상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는 지금도 과거의 괴로운 경험을 밝히지 못하는 전 일본군 '위안부'도 많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사항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2. 일본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지역에서 실태조사와 피해자 총 수, 국가별 명부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 3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일본정부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4. 일본정부는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부적용조약'에 가입할 것.
5. 일본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갖도록 평화인권사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우리는 일본정부가 자국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각국 정부와 개별적 타협을 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연대운동의 중요성을 일층 더 인식하고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1. 우리들은 이 문제에 관한 각국내외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한다.
2. 피해국은 국제법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시효부적」

「용협약」에 가입하도록 한다.

3. 유엔 인권소위원회와 특별조사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4. 199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 및 모든 국제회의에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가도록 한다.

5.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단순히 과거의 문제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달

리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적 억압이라 규정하고 모든 성적 노예제도와 강간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한다.

1993년 10월 22일

참가자 일동